

原子力の 對國民 접근방안

이 정 일
전남일보 사장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제1호기가 1978년에 가동될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설비는 총 발전설비의 8.5%에 지나지 않았으나, 15년 후인 1992년 말 현재는 31.6%로 늘어났고 총 발전량의 43.2%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1962년 이래 30년간 연평균 16%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국민의 복지수준이 향상될수록 전력소비가 증가하여 에너지 소비에 있어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발전시설을 에너지원별로 보면 1970년도에는

석유발전소가 총 발전시설의 65.5%로 절대우위를 차지하였으나 1992년에는 석유발전소는 20%로 낮아지고 원자력발전소(31.6%) 및 석탄발전소(15.3%)의 비중이 높아졌다. 수력발전시설은 1960년대에 집중 개발하여 크게 증가한 듯 하였으나 개발자원의 한계에 따라 지금은 10.3%로 낮아졌다.

전력수요의 급증에 따른 발전설비의 구성비 추이

발전설비의 구성을 보면 1960년대 중반까지는 국내 자원을 활용한 설비확충에 주력하여 수력 및 무연탄화력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는

국내 자원의 부족과 급증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주로 수입 석유에 의한 화력발전 건설에 치중함으로써 석유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와 같은 전력수요의 급증에 따라 발전설비도 크게 확충되어 왔는데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수립되던 해인 1961년 당시 36만7천kW에 불과하던 시설용량이 1992년에는 2천4백12만kW로 66배나 늘어났다.

한편 앞으로의 전력수요를 전망해 볼 때, 향후 2006년까지 연평균 6.8%씩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력수요의 급증에 따라 발전시설도 크게 확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나 부존에너지자원이 극히



원전 인근주민들을 초청 일본 원전을 방문하여 안전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장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한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자원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화석연료의 대량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산성비 등 환경오염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에서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어 앞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원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체에너지원으로 태양열, 풍력 등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경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기존 발전소보다 훨씬 많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용량의 에너지공급원으로 개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위해 원자력발전소건설 불가피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량의 연료로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발전단가가 저렴하며, 연료의 비축성이 높아 공급불안의 우려가 적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발전의 지속적인 개발을 서두르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2천년대 초까지 국내

원자력 관련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 아래,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한편 199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수립한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06년까지 총 18기의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되어있다.

197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된 이래 지난 15년 동안 원자력발전이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민주화, 개방화의 진전과 함께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른 반원전운동은 갈수록 첨예화되어 국내 원전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

다. 국민들은 원자력발전을 안전성문제의 중요성과 함께 부정적 시각으로 보게 된 것이다.

또한 개인주의와 집단이기주의의 팽배로 꼭 필요한 산업설비라도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의 환경이나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국민과 국가 전체 이익과는 상관없이 이를 반대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원자력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전소 건설의 기본요건인 부지확보마저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원자력발전에 따른 문제는 무엇인가. 원자력의 유용성과 원자력발전소 종사자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정성 문제와 방사성폐기물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없는가. 원자력에 대한 시비가 그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지금 원자력이 가져다 준 이익과 불이익을 따져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다.

물론 원자력이 완벽한 에너지원이라는 생각은 없다. 적어도 현실적으로 다른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민적 합의 속에 원자력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原子力에 對한 國民意識

원자력은 양날을 가진 칼과 같다.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될 수

있으나 잘 사용하면 문명의 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아름답지만 가시가 돋힌 장미꽃에 비유하기도 한다.

어쨌든 세계는 지금 원자력에서 에너지를 얻으려는 연구를 늦추지 않고 있고 우리는 지금 원자력을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삼으려는 시대의 흐름속에 살고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 원전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다는 데 있다. 국민들은 원자력이라고 하면 무조건 원자폭탄등 핵무기나 핵전쟁만을 생각한다. 미국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1983년에 발표한 것을 보면 미·소양국이 보유한 핵무기로 전면 핵전쟁이 일어나면 60일 후에는 북반구 중위도가 섭씨 -45도로 기온이 떨어진 상태가 1년간 지속되어 결국 인류가 전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방사성물질 때문에 작은 거미가 공룡만큼 커져서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만화를 읽고 공포를 느낀다. 그런가 하면 방사선이라고 하면 불치의 암이나 기형아, 기형가축만을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수 많은 인명피해(반핵단체 7천~1만명사망, 모스크바 발표 31명 사망)를 냈으며, 1979년 미국 드리마일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 안의 원전연료가 녹아내린 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서는 인구 1만명당 1백10명의 비율로 암이 발병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

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1989년 무늬아 출산 사건, 1990년 대뇌아 사건, 피폭 노동자 사망 등 원자력발전소 근무자들의 피폭위험이 문제가 되어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은 원자력에 대해 부정적인 면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오늘날 원자력이 발전소에는 물론 의학, 산업, 연구용으로 그 이용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방사선은 의학, 농업, 산업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X선, 컴퓨터, 단층촬영기가 검진에 사용된지는 오래 되었고 전자선과 감마선을 암치료에 이용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도 X선을 이용 음식물의 해충을 박멸하고,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원자력이 이용되고 있다.

방사선을 농업에 이용하는 또 다른 부분은 품종개량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방사6호(보리), 밀양50호(벼), 방사콩(콩나물콩) 등이 개발되었다. 산업분야에서도 방사선을 이용 비파괴검사, 측정 등으로 재료의 품질향상에 이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원자력이 가져다 준 효과는 경제발전의 기여도이다. 지난 15년동안 원자력이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발전에 미친 영향은 실로 크다.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국내 전력생산의 절반 가량을 담당하여

국가산업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전력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에 걸쳐 석유 의존도를 낮추어 수입 석유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했고 전기요금을 안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원자력발전은 건설비는 다소 비싸지만 일단 가동이 되면 연료비 등 운영비용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불가상생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하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원자력산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기, 기계, 토목, 화학, 금속 등 각종 관련산업의 발전과 기술인력 육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와 같이 원자력이 국민생활과 뿔레야 뿔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거부감이 높아지고 원자력에 대한 물이해가 해소되지 않은 것은 일차적으로 원자력을 다루는 정부나 관계기관의 원자력에 대한 시책과 홍보부족 탓이다.

국민의 원자력 인식 부정적 견해 집중

「국민들이 원자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원자력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중요한 문제는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갈수록 원자력에 대한 부

정적 견해가 높아져가는 데에 있다.

1986년 한국갤럽이 여론조사한 설문지의 한 문항이었던 「원전의 추가건설」에 대한 물음에 찬성 74.4%로 나타났던 것이 3년 후인 1989년 조사에서는 50.7%로 낮아졌고, 91년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원전 늘려야 한다」가 23.8%로 현저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발전의 안전도 물음에서도 86년 조사에서는 「안전하다」가 48.3%로 높았으나, 89년에는 26.1%, 91년에는 15.1%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원자력이 왜 안전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1989년도의 조사에서는 방사선 누출위험 (56.2%), 폐기물 안전대책 미흡 (24.5%), 환경오염 (15.3%) 순으로, 1991년도 조사에서는 방사성 물질 누출위험 (59.2%), 안전시설 결함 (19.3%), 원폭전쟁이 터질것 같아서 (14.4%)로 나타나 인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낮아져 가는 반면 방사선 누출위험에 대한 생각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상의 대 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같이 발전소 추가건설 반대, 안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방사선 누출이 위험하다는 견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장래를 어둡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결과는 반원전단체의 활발해진 활동에 비해 관계당국의 소극적인 홍보 및 정부와 원전 관계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 팽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원전에 대한 시비는 있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원자력을 환경문제와 연관시켜 환경오염의 주요인으로 잘못 알려져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여기에다 정치성을 띤 반핵집단의 가세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다.

원자력 피해 당사국 일본 원전의 필요성 인식 높아

원자력 산업에 대한 시비는 주로 원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원전의 반대자들은 원전지역 주민들과 반핵단체들이다. 원전지역 주민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에 원전이 들어서 생활권을 잃게 되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반핵단체들은 핵무기 반입은 물론 원전건설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환경파괴는 물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반원전운동도 결국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어떤 것이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가에 대해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핵의 피해가 가장 컸던 일본이 오늘날에 와서는 원자력발전소가

41기나 건설되어 있고 원자력이 가장 안정된 에너지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일본은 90년에 총리실에서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력은 필요하다」에 응답한 사람이 65%나 되었다. 그리고 44%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으며 4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원자력발전은 필요하지만 안전성에 있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에 대해 해마다 부정적인 견해가 높아져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다.

원전정책 추진과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정부와 한전이 독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을 소외시켰으며 그 결과 이해를 획득하는 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원자력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반핵단체의 주장이 먹혀들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전에 대한 홍보 내용은 원자력의 긍정적인 면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해 와 원전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호도하는 데 급급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삼엄한 경계도 원전과 국민 사이에 벽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삼엄한 경계보다 깨끗한 공원을 만들어 개방함으로써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야 할 것이다.

불신을 제거하여 신뢰성을 구축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전의 필요성과 안전성의 구호가 먹혀들 어갈 리가 없다. 그러므로 정부와 원전 관계당국은 현실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사회적 지지기반을 확보하여 원활한 전력산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원전부지 확보와 건설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과제는 국민의 이해와 합의를 도출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光州, 全南의 경우

광주, 전남 지역에서 원자력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가 발생한 것은 지난 91년 과기처가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부지신청을 받으면 서부터였다. 이 전에도 원전을 건설할 계획에 따라 후보지로 떠오른 신안, 해남, 고흥, 장흥, 보성, 여천 등 6개 지역의 타당성조사가 시행되면서 해당 지역별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결사반대 투쟁위원회」가 결성돼 지역 내에 반원전 분위기를 확대시켜 나간 바 있다.

이같은 원전 반대 움직임은 그동안 원자력 관련행정이 철저히 비밀리에 추진돼 온 데 기인한다. 국가의 에너지정책과 직결되는 사항임에도 원자력법에 의거, 국회의 동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현재 가동중인 9기의 원전

을 건설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생략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자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핵무기에 대한 두려움과 겹쳐져 있는 데도 이를 분리해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정부측에서 그동안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던 것도 반원전 움직임을 가속시키는 한 원인이 됐다.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의 경우 영광 원전 1, 2호기에서 일용직 잠급부로 일했던 지역주민들이 방사능에 오염돼 결국 병사한 사례(김철씨의 경우)와 영광지역에서 80년대 후반부터 각종 기형가축이 출현한 데 이어 급기야 원전 노동자 부인이 무뇌아를 출산하면서 「원전=핵분열, 무기」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는 대부분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그 동안 부분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원전 인근 지역의 농작물과 가축 등에서 방사능이 자연상태 이상으로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최근에는 원전에서 배출하는 온배수로 인한 어장 황폐화가 반원전 운동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또 서울 공추련(현재는 서울 환경운동연합으로 조직개편)을 비롯한 환경운동단체에서도 원자력이 당대 최악의 무공해 에너지원이라는 한전과 정부측의 주장에 맞서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적극 촉구하고 있

다. 이들은 1979년의 드리마일과 1986년의 체르노빌원전사고가 원자력발전이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 주었다면서 원전만이 에너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측의 입장에 강경히 맞서고 있다. 이들은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현재의 산업구조를 개편함과 아울러 서해안에 조수간만차를 이용한 조력발전 등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 원전건설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보존을 위한 원전이용은 세계적 추세

이러한 반원전 움직임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원전=핵무기」로 오해하도록 만든 행정당국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리고 원전 근무 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무시해 결국 방사능에 노출된 데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전지역과 그 인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이상현상과 관련, 대다수의 주민들이 본격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규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해온 한전측에 그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 원자력발전의 시행업체인 한전측의 소극성과 그 주무부처의 밀실행정이 결국 원전기피현상을 계속적으로 확대 조장해 온 셈이다.

이는 우리와 서방국가의 반원

전 움직임이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계적으로 최초로 원자력의 상용발전을 시작한 영국에서도 최근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장 건설에 있어 부지난을 겪고 있기는 우리와 마찬가지로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른 쉘라필드 주민들의 경우 「이곳에 또 핵시설이 들어오는게 싫다. 그러나 정부와 원전연료시설 사업자 측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곳을 최적으로 선정한다면 여론 수렴을 통해 이를 받아들일 생각」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정부가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할 리는 없지 않은가」라며 정부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보이는 그들과 우리의 원자력 반대운동이 본질적으로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스웨덴에서도 지난 80년에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원전건설에 반대의사를 나타내자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에너지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태양열과 풍력, 조력 등의 대체에너지원으로는 대규모 발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존자원을 이용한 펄프, 철강 등 전력 의존도가 높은 주력산업이 경영난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스웨덴 의회가 91년 6월 원자로 폐쇄 결정을 반복하고 「부족한 에너지 공급과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원자력을 계속 이용」하기로 한 정부의 신에너지정책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즉 원전 확대 건설을 통한 에너지정책이 결코 최선책은 아니나, 현재의 기술수준과 갈수록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원자력의 비중을 높이기로 국민적 합의를 모은 이 나라에서 반원전운동이 원전 자체에 대한 반발 양상을 나타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言論이 본 原子力 産業 弘報의 問題點

국민들에게 원전 정책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홍보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사회 각분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때 일수록 국민들의 불만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여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욱이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홍보는 사회적 민감성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다가 홍보과정에서 오히려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비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부지확보 문제는 단지 기술적인 차원으로만은 해결될 수는 없다고 본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언론기관에 충분한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사실대로 보도하도록 하는 일이다. 막연한 추측 보도나 왜곡보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숨김없는 자료공개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원전을 바르게 이해시켜야 한다.

원자력의 장점과 필요성 및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 종사자들을 발전소에 초청, 현장을 견학하도록 하고 설명회나 간담회, 좌담회 등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정확한 정보제공과 보도를 통해 원전에 대한 지지계층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가 현재 풀어야 할 과제는 국민들로부터 방사선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제거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방사선과 원자력의 바른 이해와 정확한 과학적 사고를 국민들에게 널리 확산시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필요 이상으로 방사선을 두려워할 만큼 원자력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오히려 이럴 때 국민들에게 방사선 지식을 확산시켜 방사선과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국민들이 스스로 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도록 엽서로 신청만 하면 「하카루군(미스터 측정)」이라 부르는 콤팩트형 방사선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

또한 일본은 IAEA 가입을 공식으로 결정한 날인 1956년의 10월 26일과 일본 동력시험에

의해 최초로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날인 1967년의 10월 26일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26일을 「원자력의 날」로 정하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은 원전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 신문, 방송, 잡지 등의 언론에 특집 기사를 제공하고, 세미나와 강연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원전에 대한 글짓기 등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 결과 「원전을 강력히 증가시켜야 한다」가 4.8%, 「조심스럽게 증가시켜야 한다」가 43.7%에 달하는 등 48.5%의 원전증가 국민지지를 획득하였다.

신문, 방송 등에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본의 원자력문화진흥재단(JAERO)은 대표적인 4대 일간지에 주 1회에 걸쳐 「에너지에 대해 말하자」라는 고정 칼럼을 통해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를 넓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숨김없는 정보제공이나 언론의 충분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원전단체의 주장과 대응논리의 빈곤

두번째 문제점은 반원전운동에 대한 대응논리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공추련, 반핵, 반원전 주의자들의 활발한 논리전개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이론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원전측이 제공한 대 국민 홍보 내용은 주로 에너지 사용, 원자력 에너지의 필요성, 경제성, 안전성, 폐기물처리, 방사선의 활용 등이 중심이다. 반핵측의 주장은 방사선의 인체장애, 사고에 대한 피해, 값 비싼 원자력발전, 농산물 피해, 폐기물, 온배수 공해 등이다.

또한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이 국민투표로 탈 원자력발전을 결정하였으며 미국과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탈 핵발전소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반원전단체의 주장과,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이 시급하다는 논리에 대해 원전측 관계당국 및 사업자의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가 아직 빈약한 실정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스웨덴의회가 원자로 폐쇄결정을 번복하는 등 선진국 여러나라들이 원자력을 계속 이용하기로 한 정보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제공하지 못한 데서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반원전단체는 원자력발전을 반대하는 8가지 이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8가지 이유로는 불안정성, 방사능 누출, 권력형 부정 비리의 온상, 비경제성, 근로자들의 피폭, 방사성폐기물, 지역공동체 파괴, 핵무기의 확산 조장 등이다.

그러나 원전관계 당국은 반원전단체들이 원자력발전을 반대

하는 이상의 8가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로서 충분하게 홍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신뢰성이 구축되지 않은 데다가 대응논리마저 취약한 상태에서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구호만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원자력은 안전하지 않다」는 국민의식을 싹트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원자력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원자력에 관한 전문적인 홍보물만을 접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저학력자들 중 40% 이상이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일방적인 홍보물만을 대했다고 했다.

홍보대상자, 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전략강화

홍보 대상자와 대상지역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 홍보전략을 세울 때는 먼저 주 목표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원전의 정보에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저학력 층이나 농어촌 주민들에게는 원자력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는 홍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도시 중심의 고학력자들에게는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의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농어촌을 상대로하는 홍보에서는 학생이나 교사를 중심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도시에서는 언론인, 사회운동가, 의료인, 문화예술인, 교수,

종교인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학생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 차원의 특별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원전관계기관의 홍보는 주로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반면, 원전건설 및 폐기물처리 후보지 주변도시 홍보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이다. 사실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해당 지역 못지않게 도시인들의 반원전운동도 거셌다. 실제 1988년 도쿄, 오사가같은 대도시의 반핵단체들은 농민들에게 엽서를 보내 「아오모리현에 원자연료시설이 건설되면 당신네들의 농산물이 방사선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네들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거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경고의 엽서를 받은 아오모리 농민들은 불안감을 느꼈으며 결국 반원전운동이 가열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원전 건설 반대입장이었던 아오모리 농협이 중재에 나서 원만히 해결하였던 사례가 있다.

한편, 선진국에서의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에 관한 홍보전략은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는데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홍보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원전운영에 따른 고장 등 사고를

사실대로 발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이해와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 당국의 신뢰회복이 국민적 합의 도출의 첩경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는 관련 당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세계 최초로 원자력의 피해당사국이 된 일본에서는 이제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획득, 원자력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합의를 굳혀가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日本 원자력관계자들이 원전의 평화적 이용목적을 국민들에게 성의껏 이해시키고 원전운전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라는 국민적인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제 원자력은 분명 우리 곁에 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혜택을 누리면서 질 높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미 원자력을 멀리할 수 없는 현실속에 있다. 따라서 정부나 관계당국은 원전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을 소외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원전의 양면성을 충분히 이해시켜 합의를 도출해 내는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산업은 결국 국민의 깊은 성찰과 이해가 있을 때만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